

2017년 타이: ‘싸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박은홍*

국문초록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빠라웃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빠라웃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데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빠라웃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 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 절차를 관장한 빠라웃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빠라웃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라웃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뿌라웃 군사정부를 ‘짜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뿌라웃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짜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제어: 뿌라웃 찬오차,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임시헌법 44조, 국왕모독죄, 짜릿모델, 타이식 민주주의

I. 들어가는 말

2017년은 뿌라웃 찬오차 군사정부로 보자면 천문학적 비용을 쓰면서 치룬 푸미폰 국왕 장례식¹⁾에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40여개국에서 조문사절단이 파견됨으로써 2014년 쿠데타 이후 소원했던 서방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방콕과 중국 쿤밍을 잇는 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중국과 협정을 맺는 등 취약했던 정치적, 경제적 정당성을 복원하기 위해 분주했던 한 해였다. 다시 말해 2017년에 들어와 그 동안 친중(親中) 행보를 보였던 뿌라웃 찬오차 군사정부가 대(對)미 및 대 EU와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텃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10월 2일 뿌라웃 총리의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2014

1) 2016년 10월 13일 푸미폰 국왕이 서거하자 뿌라웃 찬오차가 이끄는 군사정부는 1년 동안의 추모기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 10월 25일부터 5일간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특히 26일 인도에서 얘기되는 상상의 신령스러운 산 메루산(수미산)을 본판 다비식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이곳에서 다비식(화장의식)이 있었다. 장례식 비용으로 30억바트가 책정되었다. <https://edition.cnn.com/2017/10/26/asia/thailand-king-bhumibol-adulyadej-cremation/index.html>

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불편했던 타이-미국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로 해석되었다.

2014년 5월 쿠데타에 대한 강대국들의 반응은 미국 정부의 비난과 중국 정부의 수용이라는 극명한 대비로 집약할 수 있다. 미국은 적절한 제재를 실시했고, 타이와의 외교관계를 강등시켰으며, 조속한 자유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2006년 9월 19일 쿠데타에 대한 입장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반응은 2006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관대함과 무비관으로 일관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쿠데타의 주역들은 중국에 더 다가갔다. 중국에 타이를 ‘잃고’ 싶지 않았던 일본은 처음에는 쿠데타를 비난하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2015년 뿌라웃 찬오차 총리이자 군사평의회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이하 NCPO) 의장을 일본에 초청했다. 타이와 일본은 타이내 동서철도 건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베니 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4년 5월 쿠데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으나 곧 아세안 규범인 내정불간섭주의에 순응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2016년까지 외교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타이 군정체제에 대해 관대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2017년에 들어와 뿌라웃 군사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동서 양진영의 차이는 좁혀졌다.

특히 이러한 서방과의 관계 회복은 2017년 4월 6일 와치라롱건 국왕이 2016년 8월 7일에 국민투표 결과 61% 찬성을 얻어 통과된 20번째 헌법을 인준함으로써 외견상 타이의 헌정체제를 복원한 것과 관련이 있다.²⁾ 신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120일 이내에 군부 주도

2) 신헌법 서명식에는 왕실 가족들과 뿌라웃 찬오차 총리를 비롯해 각료들, 외교사절, 과도의회격인 국가입법회의(NLA) 의원들, 대법원장,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 개혁 실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가 해산되고, 과도의 회격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총선 15일 전에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과 이를 국왕이 승인하는 절차에도 각각 최대 240일, 150일이 걸릴 예정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헌법이 군 장성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직접 개입하거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5년 동안 군부가 상원지명을 하고, 지명된 상원의원들이 하원 의원들과 함께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총리는 비민선 의원도 가능하다. 또 국가 위기 시에는 최고사령관, 3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포함되는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 입법을 장악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군부 후견제도(military guardianship)를 전제로 한 민정이양이자 실제로는 군부의 장기적인 정치개입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부 후견제도는 국회의원의 25%를 군총사령관이 지명하고, 비상시에 국방안보위원회(NDSC)의 일원인 군총사령관이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도록 해놓은 미얀마의 2008년 신헌법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권력내 암투도 배제할 수 없다. 느즈막하게 왕위에 오른 와치라롱겐 국왕으로선 아버지의 카리스마라는 후광의 덕을 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의 부친과 대비되는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이제 그로선 존왕주의자(royalist)와 푸미폰주의자(Bhumibolist)를 분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의 이미지이다. 그의 세번째 부인,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의 단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몇몇 그의 최측근이 왕실과의 인연을 악용했다는 이유로 단죄되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와치라롱겐 국왕과 군사정부를 이끄는 빠라우트 찬오차 현 총리, 그리고 탁신 전 총리와의 관계이다. 빠라우트 총리가 범 ‘탁실포비아’(Thaksinphobia) 진영에 속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와치라롱껀 국왕도 마찬가지로인지는 불명료하다는 시각도 있다. 여하튼 2017년 10월 말에 있었던 국왕 장례식을 통해 빠라우트 총리와 왕실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보기 드문 화려한 장례식을 통해 빠라우트 군사정권은 존왕주의적 군사정권(royalist-military regime)으로서의 면모를 국내외에 각인시켰다.

문제는 포스트-푸미폰 시대에 접어들어 푸미폰 국왕이 군림하던 시대처럼 ‘국왕폐하를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이다. 과연 1782년에 탄생한 짜끄리 왕조의 안전과 안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는 민주주의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콘디’가 이끄는 엘리트 정치가 계속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II. 정치·경제 개관

2017년 말에 이어 2018년 초에 들어와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재산공개에서 최고가 손목 시계를 신고하지 않은 빠라우트 원수원 부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이어지면서 군사정부의 청렴 정치 약속에 손상이 갔다.³⁾ 빠라우트 총리는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빠라우트 부총리를 끝까지 엄호했다.

주목할 것은 빠라우트 총리는 임시헌법 제44조가 부여한 비상대권을 개혁과 억압이라는 양날의 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국왕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112조 적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 특히 ‘타이식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의 전형적인 스트롱

3) www.bangkokpost.com/news/politics/1413223/80-000-online-petitioners-demand-prawits-removal

맨 정치(strongman politics)였던 ‘싸릿모델’을 모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스트롱맨 정치는 계엄령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임시헌법 제44조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제44조는 2014년 쿠데타 이후 설치된 NCPO의 의장인 빠라우트 찬오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NCPO 의장령의 경우 타 기관의 동의가 불필요하고 사후통고만으로 충분하다.

비상대권의 효시는 1957년 피분 송크람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고 권력을 잡은 싸릿 타나랏 군부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임시헌법 제 17조였는데, 이 같은 조항은 쿠데타마다 제정된 임시헌법에 답습되었다.⁴⁾ 국민의 아버지를 자처했던 싸릿 타나랏 장군은 비상대권을 활용하여 1932년 입헌혁명 이후 침체해있던 왕실을 부흥시키고 신성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동시에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울 만큼 타이경제의 근대화를 추진했다.⁵⁾ 반면 그는 ‘타이식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정당을 해산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반정부 성향의 학생, 노동자, 언론인, 정치인 등을 구속하고 10여 개의 신문을 폐간 조치했다. 이때 싸릿 총리는 군부의 정치개입이 정당화되는 ‘타이식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다. 군부의 정치개입 명분은 부패한 정당정치를 청산하고 국가개혁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2014년 5월 22일 쿠데타의 명분도 그러했다.

물론 2014년 5월 쿠데타와 함께 공포되었던 계엄령은 2015년 3월 31일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럿셀 국무차관보가 방콕을 방문해서 계엄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4) 이후 계속된 쿠데타 직후 공포된 임시헌법에 이와 같은 조항은 항상 삽입되었지만, 2006년 쿠데타 이후 공포된 임시헌법에만은 이러한 조항이 없었다.

5) 싸릿 군사정부의 개발주의(간파타나)는 “일하는 것이 돈이고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 “흐르는 물, 밝은 전기, 반듯한 도로” 등과 같은 구호, 방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었다(박은홍 2003: 62).

위배된다는 의견 표명을 한데다가 휴먼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과 같은 국제인권 단체들이 군사법정에서의 민간인 재판과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를 문제시하면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 것과는도 연관이 있었다.⁶⁾ 물론 뿌아웃 총리는 계엄령이 국내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다분히 상투적인 방어논리를 폈었다.

한편 뿌아웃 군사정권 초기에 공언한 적대적 정치세력간의 화해(쁘렁덩)에 대한 기대는 사그러들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8월에 대법원이 전 총리 아피싯 웨차치와와 전 부총리 수텝 트억수반에 대한 살인 혐의를 기각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2010년 시위자들과 보안군 사이의 충돌에서 적어도 91명이 사망하고 1800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된 혐의였다. 반면 2017년 8월 25일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대법원 형사 재판 판결을 앞두고 망명을 택했다. 잉락은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을 시장가보다 50%가량 높은 값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목인한 혐의를 받아왔다.⁷⁾ 또 반독재민주주의연대(UDD) 의장 짜투판 프롬판이 구속 수감되어 1년형에 처해졌다. 2009년 연설에서 아피싯 전 총리를 모독한 혐의이다.

그렇지만 총선을 앞두고 탁실포비아(Thaksinphobia) 진영내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군사정부는 헌법상의 변화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선거 일정을 계속해서 미루었는데 새로운 헌법이 반

6)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인권단체들은 타이 정부가 유엔 등지에서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https://www.hrw.org/world-report/2018/country-chapters/thailand>

7) 잉락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농가 소득보전을 이유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사들이는 정책을 펴 일부 지역 농민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재판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손실과 부정부패 방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5년형을 선고하고, 향후 5년 동안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2016년 10월 민사소송에서는 무려 350억바트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포됨에 따라 지연을 정당화할 명분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빠라웃 찬오차 총리는 기자들 앞에서 명확한 선거일은 2018년 6월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정부의 이 공표는 2017년 10월 2일 빠라웃 총리가 도널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을 때 타이가 2018년 안에 민주적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영한다는 트럼프의 우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읽혀졌다.

분명한 것은 총선 실시 이후에도 빠라웃 찬오차 총리가 종종 악으로 간주한 타이의 정당들의 힘은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제 1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 당은 2006년 쿠데타로 쫓겨난 탁신 친나왓과 2014년에 마찬가지로 군부에 의해 축출된 탁신의 여동생 잉락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당으로서 2001년 이후 모든 선거를 이긴 정파이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락타이당의 뒤를 이은 친탁신계 피플파워당, 프어타이당은 전례 없는 마을 지원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부, 동북부지역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친탁신 정치세력의 기반인 북부, 동북부지역을 두고 군사정부, 보수성향의 민주당, 친탁신 프어타이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선거 일정 확정을 앞두고 군부와 민주당 간에 일정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는 1973년에 ‘타이식 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던 타넘 끼티까촌 군사정부에, 그리고 1992년 수친다 크라빠라운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민주당이 여러 정당들,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해 저항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반면 경제부문에서는 2014년 0.8%, 2015년 2.8%, 2016년 3.2% 성장률이 보여주듯이 타이경제는 저성장을 면치 못했다. 2017년에 들어와 가까스로 4년만에 최고 호조인 3.9%를 기록했다.⁸⁾ 까시껀리서치센터는 2018년에 부동산과 중소기업은 공급 과잉과 치열한 경쟁

8) <https://www.adb.org/countries/thailand/economy>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온라인 쇼핑은 계속해서 더 높은 비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타이경제가 2018년 3.9%를 넘어 4%로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주로 공적·사적 투자, 수출, 관광산업 등이 이끌어갈 것이고, 민간부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관광산업은 2017년에 8.2% 성장했는데 2018년에는 베트남 등이 관광유치 경쟁국으로 부상하면서 6.5-7.5%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온라인 쇼핑은 2017년에 20% 성장했는데 2018년에는 20-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물류, 광고 매체, 전자 상거래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부동산 부문은 공급 과잉과 높은 가계 부채로 경제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은행들은 개발업자들과 주택 구입자들을 상대로 한 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보았다. 위험 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과 정부의 내년 총선실시 계획을 포함한 정치 일정을 들었다(Wichit 2017).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타이는 사업하기 용이한 국가 순위에서 190개 국가 중 46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 4월 4일 관보에 실린 NCPO No. 21/256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NCPO는 사업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No. 21/2017를 임시헌법 44호에 의거해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고속철도 사업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제44조를 발동하여 법적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군사정부는 제44조가 발동된 사례는 국민통제보다는 부패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 처벌과 같은 개혁조치였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빠라우트 찬오차 총리가 탁신의 경제정책 브레인이었던 솜킷 짜투시피탁을 등용하고 탁시노믹스(Thaksinomics)를 차용하기까지 하면서 농촌 사회를 유인하는 정책을 폈고, 국내총생산을 부양하기 위해 국가

9) https://www.dlapiper.com/en/us/insights/publications/2017/04/summary-of-the-order-of-ncpo-no-21_2560

예산에 불을 지폈지만 교육, 혁신, 생산성을 전혀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Pesek 2017).

요컨대 뿌아웃 군사정부는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가로 물질적 풍요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성과 정당성’(achievement legitimacy)을 추구하였다. 이를테면 친탁신과의 지지기반인 북부, 동북부 농촌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여러 국가계획이 입안했는데 빈곤계층 등록,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180억바트에 이르는 쌀생산 농가 지원, 1년 이내 고속인터넷 통신망 설치, 20년 이내 농가소득을 연 39만 바트로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농민 20년 계획”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 프로젝트는 군부와 보수진영이 비난했던 탁신정부와 잉락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빈축을 샀다.

또 2016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진국 탈피를 위한 큰 그림인 ‘타일랜드 4.0’ 실현의 견인차가 될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이하 EEC) 프로젝트 추진을 공표하였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스마트 산업·스마트 시티·스마트 피플을 성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목표이다. EEC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산업이 몰려 있는 방콕 동남부 지역인 짜청사오, 춘부리, 라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춘부리에는 디지털 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파크가 설립된다(OECD 2018, 18). 2017년 2월 15일에는 타이투자청(BOI)이 기술주도혁신경제를 추구하는 ‘타일랜드 4.0’이 타이를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미의 ‘Opportunity Thailand’라는 주제하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뿌아웃 총리가 기조연설에 초대되었다.

‘타일랜드 4.0’이라는 기치 하에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EEC 프로젝트는 2017년 7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뿌아웃 찬오차 태국 총리를 예방, 예정보다 오래 늦어진 중국 원난성 쿤밍과 방콕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되었다. 중국으로 보자면 뿌라웃 군사정부의 EEC 프로젝트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¹⁰⁾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고속철도 사업이 역내 타이의 위상을 높일 것”이며 “중국과 타이는 서로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와 중국은 2014년 이래로 열차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로 했으나 차관과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쟁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¹¹⁾.

요컨대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포함하는 EEC 프로젝트는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EC) 등의 제재 국면에서 뿌라웃 군사정부가 선택한 친중노선과 밀접하다.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뿌라웃 군사정부로 보자면 친중노선은 외교안보 사안만이 아니라 성과 정당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절실한 경제현안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2. 타이식 민주주의와 ‘훈정동맹’

타이 군사정부에게 2017년 10월 초 뿌라웃 총리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회동은 미국의 타이내정 간섭 중지와 2014년 5월 쿠테타

10) 타이-중국 양국은 1천790억바트 규모의 고속철도 1단계 사업 추진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 사업은 타이 수도 방콕에서 동북부 나콘 라차시마를 연결하는 약 260km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다. 이 구간 공사가 끝나면 타이 동북부 국경지대의 농카이와 라오스를 거쳐 중국까지 연결된다. 또 남쪽으로는 타이 동남부 해안가의 산업지대까지 확장된다. 최고 시속 250km의 고속철이 오는 2021년 완공되면 현재 차량으로 4.5시간이 걸리는 이 구간의 이동시간이 1시간 17분 정도로 단축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4/0200000000AKR20170724174200076.HTML>

11) <https://www.bangkokpost.com/news/general/1293110/thailand-china-to-moveforward-on-train- eec-projects>

이후 뿌라웃 찬오차 NCPO 의장 겸 총리가 여러 차례 언급한 ‘타이식 민주주의’에 대한 용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타이식 민주주의’(뿌라차띠빠따이뱌타이)는 2006년 쿠데타 이후에도 언급되었고 논란이 된 바 있다. 뿌라웃 총리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은 그들 나름의 민주주의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타이식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보다는 ‘타이다움’(깜뻠타이)이 중요하다. ‘타이다움’은 ‘뜨라이룽’으로 불리우는 타이 국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타이인이 타이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충성을 바쳐야 할 세 축이 있다. 빨간색이 뜻하는 국가, 하얀색이 뜻하는 종교, 파란색이 뜻하는 왕실이 그것이다. 라마 6세 왓치라웃 국왕(재위 1910-1925)에 의해 만들어진 이 국기는 1917년 10월 1일부터 사용되었다.

영국 유학까지 마친 왓치라웃 국왕은 사회를 구성한 인간들은 상호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이고 어떠한 도전도 불가능한 국왕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국기는 일정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과 같고, 국왕은 다른 신체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뇌와 같은 존재로서, 국왕에 대한 충성이 민족에 그 자체이고, 인민들은 자기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는 더 이상 삼(타이)인이 아니라고 설파했다(Baker and Pasuk 2008: 107; 박은홍 2014에서 재인용).

현재의 어법으로 정리하자면 왓치라웃 국왕이 헌정과 의회주의를 거부한 이유는 민의를 반영하게 되는 선거에서 덕망(바라미)을 갖춘 ‘좋은 사람’(콘디)이 뽑힌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 데 있다. 요컨대 당시 그가 보기에 인민은 미성숙한 존재였다. 그러기에 그가 원했던 것은 인민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최정상의 ‘좋은 사람’인 군주가 통치하는 계몽군주제, 헌정(憲政)이 아니라 훈정(訓政)이

었다. 존왕주의자 짜릿 타나랏 장군의 쿠데타로 출범한 1957년 체제는 ‘1917년 체제’를 부흥시키면서 군과 왕실간의 혼정동맹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 혼정동맹은 군주 네트워크(network Monarchy)의 핵심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 ‘타이식 민주주의’, ‘좋은 사람’ 등은 이 혼정동맹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정동맹은 일부 시민사회를 끌어들이어 이들이 2006년 이후 존왕주의 쿠데타를 ‘좋은 쿠데타’로 여길 만큼 외연을 확장해왔다. 선출된 권력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좋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보다 타يدا울 수 있다는 논리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는 무관하게 좋은 사람에게 무한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또 그것이 타이식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타이식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호적 태도가 2006년 쿠데타 때부터 드러났다는 점이다. 타이 영자신문 《더네이션》의 헤드라인은 “수개월의 소문이 현실이 되었다.” “타신을 몰아낸 군사 쿠데타는 많은 사람에게 필요악일지도 모른다”라는 논평을 달았다. 치앙마이 웹사이트 《시티라이프》는 “평화적 군사 쿠데타”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타이어 신문인 《더매니저》는 군용 차량 위 군인들 사이에 앉아 있는 두 어린이의 사진을 실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승리의 V사인을 하고 있었다.¹²⁾

반면 해외 타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타이 국내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그들을 ‘서구식 민주주의의 지지자들’로 간주했다. 이들은 ‘필요악’이라는 개념을

12) 물론 《더네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 악행을 했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쿠데타 주역들은 과거 주역들보다 운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 인식은 매우 취약하다. 총을 든 사람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총을 쏜 후의 연기만큼만 지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5363618.stm>

넘어서 군부 쿠데타의 건설적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1960년대 초 스트롱맨 짜릿 타나랏이 만들어낸 타이식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를테면 타이 국내에서 인권과 시민사회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지식인 사네 짜마릭이나 뿌라웁 와시와 같은 사람들은 타이에서의 쿠데타는 타이의 국내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냉엄한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Pattana 2006).

NCPO 의장인 뿌라웁 찬오차는 국가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타이식 민주주의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일각에서는 그가 타이식 민주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가 타이식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동남아국가들이 이들 고유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첨언했던 사실은 그가 의미하는 타이식 민주주의가 제한된 민주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니었는지, ‘타이식’ 혹은 ‘타이다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있었는지,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아닌지, 군부의 정치개입 없이 선거와 민주적 방식만으로 타이 국내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지, 이를테면 타이 국내에는 군주제를 유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공화정 수립을 고려하는 세력이 각각 대립하고 있음을 못보고 있는 것인지 등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Pravit 2014).

이같은 맥락에서 1973년 반군정 투쟁을 이끌던 학생운동의 지도자 섹산 뿌라썬은 잉락정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014년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널리 쓰였던 ‘타이식’, ‘타이다움’이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타이인의 사고를 지배해왔으며, 이것이 타이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탐마삿대학 경제학부가 개최한 타이 사회 전망에 관한 강연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콘마 이디)을 구분해내는 이 관념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이들은 “사람은 서로 평등하지 않고, 정치권력은 ‘좋은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야 하며, ‘나쁜 사람’은 정치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좋은 사람’은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며, ‘나쁜 사람’은 촌락이나 도시 서민으로 살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 그리고 “민주적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과 그들을 뽑은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갈등을 조장하는 또 다른 문제 요소로 ‘타이다움’의 관념을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권력 집단에 이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타이적인지’ 의문시되는 일이 빈번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범주 밖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도외시되거나 추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이의 미래와 관련해서 썩산은 “‘좋은 사람들’이 국가체제를 통제하는 보수주의자들과 결탁할 때, 이들은 서로 연합해 ‘나쁜 사람’을 민주주의 절차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통제할 규칙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섞인 전망을 했다 (Papton and Aekarach 2018).

Ⅲ. 2017년 신헌법과 비상대권 임시헌법 제44조

쿠데타 3주년을 맞는 2017년 5월 22일 전현직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병원인 방콕 소재 프라몽꿏끌라오 근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사고가 군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일단의 민주화 세력들은 쿠데타 발생 3주년을 맞는 반군정 시위를 벌였다. 민주화세력과 국제인권단체들은 2017년 4월에 공포된 신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시헌법 제44조의 횡포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해왔다.

2014년 7월 22일에 발효된 임시헌법 제44조항의 골자는 NCPO

의장이 명령권, 억제력, 집행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준하는 모든 지시와 결정과 행위는 합법이며 합헌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력한 관료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신속한 행정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제44조의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정부는 임시헌법에 속했던 제44조를 2017년에 반포된 신헌법에 포함시켰다.¹³⁾ 이후 빠라웃 짬오차 총리는 제44조를 도구 삼아 수많은 명령을 내렸다. 제44조에 입각한 명령으로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위원 임명문제, 공유지 이용 관련 법안과 정책 제정, 교육부 행정 개선, 불법 어업 문제 해결, 과도한 복권 가격 규제, 부정한 공직자 처벌, 반부패위원회(NACC) 선발전위 임명, 특별기구 설치, 군 장교들에게 치안유지 권한 부여, 5인 이상 정치집회 금지, 군사정부의 최대 적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경찰 계급 박탈 등이 포함되었다. 2016년 7월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있기 한 달 전에 가장 많은 수의 제 44조 명령이 발령됐다. 이로써 임시헌법 44조는 빠라웃 군사정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렇지만 특권(special power)에 해당하는 제44조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제44조를 개혁(reform)의 수단이 아니라 전제(tyranny)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그러하다. 최근 NCPO 법률고문이자 부총리인 위싸누 크르어응암이 제44조에 따라 발령된 일부 법규는 폐지되고 다른 일부 법규는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영구 법률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하자 제4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Wasamon 2018). 제44조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NCPO가 제44조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2018년 총선을 앞두고 타이 사회에

13) 2015년 4월 NCPO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제 44조에 의거, No.3/2015명령으로 계엄령을 대체했다. 제44조가 NCPO 의장에게 부여한 절대권력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종료된다.

서 민주적 요소보다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 본다. 이들은 군부가 제44조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특권을 행사하는 뿌라웃 총리는 권력에 중독되어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¹⁴⁾

탐마삿대학교 법학과에 뿌린야 교수는 2017년 헌법은 임시헌법 제44조 같이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지속시키는 최초의 영구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헌법 44조가 기술적으로 제약이 없는 무한정의 절대권력을 허용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뿌린야 교수는 제44조를 견제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서 헌법 제77조를 언급한다. 이 조항은 ‘모든 법률은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청문회를 거쳐야하며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77조는 처벌과 같은 강력한 의무가 따르지 않는 완곡한 제안 형식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정된 149건의 명령은 타이 정치 역사에서 제정된 최대 수치이다. 뿌린야 교수는 사람들이 뿌라웃 총리가 임시헌법 제44조를 도구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고 있으나 제44조가 해결책에 이르는 지름길을 제시해줄 수는 있어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제44조가 이해당사자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이 제안은 전혀 투명하지 않은 제44조의 성격에 반한다. 뿌린야 교수는 제44조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선거가 도래함에 따라 타이를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NCPO가 제44조 활용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쫘라롱폰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반딧 역시 제44조가 ‘국가 안의 국가’와 같은 특이한 것이라고 말한다. “제44조는 2017년 헌법에 근거한 법적 절차의 진행을 더

14) <https://thaipoliticalprisoners.wordpress.com/tag/article-44/page/7/>

욱 힘들게 한다”. 타이는 이미 새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2016년 국민투표와 같이 제44조에 영향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시민의 권리를 더욱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Wasamon 2017a).

2017년 4월에 반포된 신헌법에 근거한 헌정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무소불위의 임시헌법 제44조의 발령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iLaw 2015/11/18).

1. 행정개혁의 사례

2014년 12월 25일 - NCPO 의장은 임시헌법 44조에 입각해 No.1/2014명령으로 지역 의원과 행정관직 임명 과정을 일시적으로 변경했다. 이전에 NCPO는 No.85/2014 고시를 통해 지역의회 의원 선거를 중단하고 임명제로 대신하게 했다. 그러나 No.1/2014명령은 임기가 다해 퇴임을 앞둔 지역 의회와 지역 행정기관 구성원이 그대로 직책을 맡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이 임기 완수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임하는 경우 의회는 현 의석 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남은 의석수가 지역행정조직법에서 요하는 총의석수의 과반 미만이 아닌 경우 공석을 채울 의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2015년 4월 29일 - NCPO 의장은 미신고 미규제 불법어업 문제 해결에 관한 No.10/2015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리 직속의 임시 부서인 불법어업대책본부(CCCIF)가 조직되었고, 책임자로 해군 총사령관이 임명되었다. 이 명령은 유럽연합(EU)에서 경고해온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동시에 미신고 미규제 불법 어업을 예방, 진압, 근절할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2015년 4월 16일 - NCPO 의장은 임시헌법 44조에 입각해 No.6/2015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개편과 능력개선, 부서 행정의

타당성을 이유로 교육부 관료 6명이 전보 조치되었다. 같은 날 교육부 산하 기관의 행정 권력 재편성에 관한 No.7/2015명령이 공포되었다.

2015년 4월 23일 - 이주 노동자와 인신매매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면서 NCPO 의장은 No.9/2015명령으로 외국 인노동자 관리 사무소장직을 맡고 있던 촌부리 지역 고용센터 공무원인 피짓 닐통감을 해임했다.

2015년 4월 24일 - NCPO 의장은 No.8/2015명령을 통해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새로운 구성원을 임명했다. 이 명령은 정부 선발위가 추천한 후보 4명을 두고 국회가 임명을 거부하자 내려진 조치였다. 국가입법회의(NLA)가 임명을 거부한 후 내각에서 이 문제를 재고했고, 내각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내각 선에서 임명하는 일은 부당함을 밝혔다.

2015년 5월 1일 - NCPO 의장은 No.11/2015명령을 내려 복권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복권부(GLO) 임원 전원이 직위해제 되었다. NCPO 의장이 따로 명령하거나 NCPO가 헌법에 준해 소멸하기 전까지 정부복권부(GLO)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명령에 따라 명시한 것 보다 높은 가격에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대 한 달의 금고형이나 최대 1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군 총사령관이나 육군 제1지역사령관이 법률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017년 6월 30일 - NCPO는 임시헌법 제 44조를 이용해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과도한 범칙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이주 민법 시행을 최대 120일까지 연기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 기한 안에 타이 정부는 타이 내 불법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할 것이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세 가지이다. 본국으로 돌아가

거나, 타이-미얀마 국경지역으로 가거나, 5개 <타이내 미얀마인 국적조사센터>에 출두하는 것이다.

2. 인적쇄신의 사례

2015년 5월 15일 - NCPO 의장은 조사 대상인 공무원과 임시발령 관련 조치에 관한 No.16/2015명령을 공포했다. 해당 명령으로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는 45명의 관료가 대기발령 처리되었다. 같은 날 NCPO 의장은 특별경제구역으로 유용할 부지를 탐색, 제공하는 일에 관한 No.17/2015명령을 내렸다. 해당 부지가 국유화되었다.

2015년 9월 5일 - NCPO 의장은 No.26/2015명령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 중령 탁신 친나왓을 직위 해제했다.

3. 국민통제의 사례

2015년 4월 1일 - NCPO 의장은 2015년 4월 1일 계엄을 해제한 뒤 임시헌법 44조에 입각해 국가질서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국가질서와 안보유지 관련 No.3/2015명령을 내렸다. No.3/2015명령에 따라 5인 이상의 정치집회가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평화유지를 위한 공권력은 모든 개인을 신문, 체포, 소환할 권력을 갖는다.

2015년 7월 22일 - NCPO 의장은 No.22/2015 명령을 통해 도로상 자동차, 모터사이클 경주의 문제를 해결·방지하고 위와 같은 목적의 오락시설과 장소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상기 명령

은 자동차 경주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부모는 자식이 이 같은 집회에 참가하는 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미성년이 이를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부모는 최대 3개월 금고형과 최대 3만바트 벌금형에 처한다. 상기 명령은 또한 경주와 기타 다른 목적의 자동차 개조를 금지한다.

2015년 7월 23일 - NCPO 의장은 No.23/2015명령으로 마약규제법 시행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이 법집행과정을 지원하며, 이에 군은 용의자의 주택과 승용차를 수색할 수 있고 최대 3일간 구금할 수 있다.

IV. 존왕주의와 국왕모독죄 형법 제112조¹⁵⁾

2017년 8월 타이 동북부 지역 콘깐 지방법원은 국왕모독죄로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던 짜투팻 분타라락사에게 2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국왕 와치라롱껀 국왕에 대해 부정적인 프로필을 실은 《비비시 타이》(BBC Thai)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3일에 체포되었다. 체포되던 당시 그는 콘깐대학교 법학부 학생이었고, 이 대학 학생들 중심으로 결성된 ‘다오딘’ 활동가였고,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전국조직인 새로운 민주주의운동(NDM) 회원이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현 총리인 빠라웃 찬오차 총리가 콘깐지방을 방문했을 때 수잔 콜린스의 작품 《헝거게임》속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선사해 체포된 경력도 있다. 그는 2016년 8월에는 군부가 주도한 개헌안 반대 유인물을 살포하

15) 이 장은 (Metta 2017)와 박은홍(2012; 2018)에 의존하였다. 국왕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에 따르면,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에 대해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 투옥되기도 했다.

2018년 1월 29일자 타이의 영자일간지 《방콕포스트》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활동해 온 차녹난 루엡쌌 일명 ‘까똥’이 짜투팃과 마찬가지로 《비비시 타이》(BBC Thai)에 게재된 국왕의 프로필을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은 직후 망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짜투팃 다음으로 그 기사를 공유한 페이스북 사용자 3,000명 가량 중 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입건된 두 번째 사람이다. 차녹난은 자신이 군주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형법 112조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타이를 떠났다고 친구들에게 알렸다. 이전에 차녹난은 국왕모독죄로 알려져있는 형법 112조가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입막음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함께 행동했다. 이들은 UN과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형법 112조에 비판적인 온라인 신문 뿌라차타이는 차녹난이 아시아의 한 국가로 도피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다.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노동운동가 솜웃 프룩사카셈속도 국왕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의 폐지를 주장하다가 이 법을 위반한 죄로 7년동안 수감되었다가 출옥하였다. 2015년에는 한 남성이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키우는 개를 비꼬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기도 했다.

주목을 끄는 또 다른 사건으로는 국왕모독죄로 망명길을 선택한 쏘삭 짜얌티라사꾼 탐마삿대학 역사학과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한 여섯 명이 2017년 4월경 형법 112조와 컴퓨터범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이다. 한때 부대 내에 억류되기도 했던 이들은 보석신청을 거듭 거부당했다. 구금 84일 후 뿌라웻 뿌라파누꾼을 제외한 모두가 석방됐다. 뿌라웻 뿌라파누꾼은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 국왕모독죄인 형법 112조를 10회, 소요죄인 형법 116조¹⁶⁾를 3회

16) 국왕모독죄인 형법 112조와 함께 형법 116조는 내란선동을 하는 자에 대해 최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중견 변호사이다. 그는 국왕의 영향권 하에 있는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문서에 서명하거나 다른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최초의 인물이다.

군사재판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은 길고 처벌도 무겁다. 이것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우회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국왕모독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인권단체인 아이러(iLaw)는 군사재판에서 많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무죄를 호소했지만 대부분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4년 쿠데타 이후부터 2017년 10월 초 사이에 형법 112조 사건 중 총 90건의 사건을 추적할 수 있었는데, 이 중 38건의 재판이 군사 법정에서 다루어졌다.

2006년 9월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운동가, 언론인, 학자, 정치인 등이 국왕모독죄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 대상은 평범한 시민들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주로 소셜 미디어의 역할 확대에 의한 것이었다. 대부분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이 있었고, 각 게시물을 분리해서 다룸으로써 가혹한 처벌이 적용되었다. 지금까지 적용된 가장 가혹한 처벌은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개의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선고된 70년 형이다.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된 마녀사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페이스북 집단은 극우적 성향의 에스에스(SS, Social Sanction)이다. 지난 2011년 타이네티즌 네트워크(TNN)는 에스에스 페이스북 운영자가 왕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한 40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게시했다고 발표했다. 거론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일부는 기소당했다. 온라인 마녀사냥 현상은 감소했으나 2016년 10월 13일 라마 9세 푸미폰 국

7년의 형을 내릴 수 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이 법은 반정부 시위 주동자들을 진압하는데 이용되었다.

왕이 작고한 이후 보다 악의적인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2010-2012년 사이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형법 112조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서명 운동을 포함해 학술적, 문화적, 사회적 캠페인이 일어났다. 특히 일명 ‘아꿍’으로 알려진 암존 땅나파꾼의 죽음을 계기로 형법 112조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는 2010년 아피싯 민주당정부에 저항하는 ‘레드셔츠’의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국왕을 모독하는 문자 메시지를 아피싯 총리의 비서에게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문자 발송 방법 자체도 모른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형법 112조 위반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옥사했다.¹⁷⁾

형법 112조 개정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은 카나니띠랏이다. 이들이 작성한 개정안은 처벌의 축소, 누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유죄 면제 사유의 확대라는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개정 초안은 의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2011년 말에는 진실화해위원회(TRCT)가 형법 112조의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NCPO 통치하에서 지난 10년 기간 중 가장 많이 형법 112조가 적용되었다.

그동안 형법 112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두 흐름이 있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 대부분 보석신청이 거부된다는 점, 사건이 비공개로 조사되고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이 첫 번째 비판의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의 비판과 관련하여 판사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와 왕실간의 관계를 보자면, 절대군주제 시기 재판을 결정짓는 최고권력은 국왕이었다. 라마 5세 쥘라롱껀 대왕(재위 1868-

17) <https://www.reuters.com/article/us-thailand-lesemajeste-idUSBRE84709M20120508>

1910) 통치 시기 근대식 사법부를 두라는 강대국들의 압박 하에서 법무부가 1892년에 설립되었고, 모든 법원을 그 산하에 두었다. 이 과정에서 라마 5세의 14번째 아들인 끄롬 루엡 랏차부리 디렉크릿이 타이 사법제도와 법을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1932년 입헌혁명을 계기로 절대군주정이 입헌군주정으로 바뀌고, 국왕은 헌법의 지배를 받게 됐다. 자연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나 사법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법관들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왕실 수호에 두고 민주주의보다는 존왕주의를, 가진 것 없는 인민대중 중심의 역사보다는 위대한 영웅 중심의 역사를 존중하는 것보다도 관련이 있다.

요컨대 21세기 타이에서는 100년 전 라마 6세가 이론화한 타이 국가 정체성으로서의 ‘국가,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국왕에 대한 불충은 반국가 행위라는 110년 전에 만들어진 국왕모독죄의 정당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112조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군부와 사법부의 지지뿐만 아니라 70년이라는 최장의 재위기간을 누린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의 도덕성에 기반한 카리스마와 문화권력의 위력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국왕 라마 10세가 라마 9세가 공들여 일군 문화권력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할 때 형법 112조에 대한 저항의 수위가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은 곧 ‘승계의 위기’(crisis of succession)를 뜻한다.

V. 맺는말- 예정된 총선, ‘짜릿모델’에 대한 도전

총선을 앞두고 빠라운 찬오차를 총리직에 복귀시키기 위한 준비

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4월에 반포된 헌법은 비민선 총리 후보와 군소 정당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주었다. 이를테면 정당명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게 된다. 이 제도 하에서는 특정 정당이 하원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선거 이후 만들어질 정부는 연립정부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헌법 하에서는 하원에서 총리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하원과 상원을 소집해 총리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모두 NCPO가 임명하게 되는 상원의원 250명이 비민선 정치인을 총리로 선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빠라웃 현 총리는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연임할 여지가 크다.

실제로 품짜이타이당처럼 빠라웃 총리 연임을 피할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생겨난 정당들도 있다. 몇몇 정부요인들도 친군부 성향의 정당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 경제부처 사람들로, 경제를 총괄하는 솜깃 부총리, 산업부장관 옷타마, 무역부장관 쏘뜨리앗 등이다. 전(前)의원들과 여러 정당의 원로 정치인들 다수가 이 예비당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개혁당이나 수텝이 이끄는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 지도부가 준비하는 신당도 빠라웃을 지지하는 정파이다. 이외에도 청렴한 정치인으로 각인되어 있는 잠롱 스리므영도 빠라웃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우호적이다. 이들 정파는 빠라웃 찬오차가 강조해온 타이식 민주주의에 동조하는 세력들이다. NCPO 의장에게 부여된 비상대권 임시헌법 제44조에 활용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다. 이미 2017년에 반포된 신헌법이 군부 후견주의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빠라웃 NCPO 의장을 차기 총리로 옹립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이는 비상대권을 활용하여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의 신성화와 타이식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했던 짜릿 통치모델의 부활에 대한 지지이다.

반면 2018년에 들어와 민주당 창당 72주년 기념식에서 아피싯 웨

차치와 당대표는 국민이 참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당 이념으로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노선은 빠라웃 군사정부의 관료주의나 친탁신 프어타이당의 포퓰리즘과 다름을 공표하고 복지와 시민권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체제 실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타이식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정당정치를 악으로 간주하는 빠라웃 총리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향후 임무는 대중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 원로이자 전 총리인 추안 립파이도 이러한 아피싯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는 탁실포비아 진영내, 훈정(訓政)동맹 내에 일정한 균열이 일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부 쿠데타에 우호적이었던 민주당이 제한적 민주주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읽힐 수 있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싸릿모델’에 도전장을 꺼낸 셈이다. 다시 말해 자의적으로 정의된 ‘좋은 사람’(콘디)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멋대로 다스리게 하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대표성과 유권자의 주권을 축소하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 개진된 것이다.

그러나 설사 빠라웃 현 총리가 총선 이후 연임을 하지 못할지라도 2017년 헌법체제 하에서는 군의 정치개입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를 후견세력으로 하는 준민주주의 혹은 준권위주의체제의 출범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내내 빠라웃 군사정부는 60년전 싸릿 타나랏 장군이 그러했듯이 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들이 내건 네 가지 목표, 즉 민주주의 회복, 국민통합, 부패척결, 경제성장 중에 특히 경제성장에 주력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쿠데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이유도 경제성과를 의식했기 때문이고, 친중노선의 폐달을 계속 밟아온 이유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연관된 동부경제회랑(BEAC)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Thailand 4.0’, 즉 기술주도혁신경제로의 비약을 약속한 타이 정부가 2017년 초반에 내건 ‘Opportunity Thailand’에서 기회란 ‘사업의 기회’(business opportunity)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개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회’(democracy opportunity) 없이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부활한 ‘짜릿 모델’에 대한 도전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는 현 군사정부 하의 불안한 정세가 이를 암시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홍구. 2017.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777> (검색일자 2017/10/11)
- 박은홍. 2003. “타이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퍼쿰모델’에서 ‘탐마랏모델’로.” 『기억과전망』 통권 5호: 56-73.
- _____. 2012. “아푼의 죽음과 태국의 형법 112조.” 『EMERiCs 이슈분석』. (검색일자 2012/10/29)
- _____. 2014. “민족혁명과 시민혁명: 타이와 미얀마.” 『동남아시아연구』 24(2): 127-165.
- _____. 2017. “근대적 절대군주제와 국왕모독죄: 타이 정치체제 재검토.” 『동남아시아연구』 27(1) : 53-94
- _____. 2018. “태국 국왕모독죄 쟁점분석.” 『EMERiCs 이슈분석』. (검색일자 2018/4/5)
- 일본 무역 진흥기구 아시아 경제 연구소. 2017. 『아시아 동향 연보 2017년판』. https://ir.ide.go.jp/index.ph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snippet&i

- ndex_id=5031&pn=1&count=20&order=17&lang=japanese&page_id=26&block_id=95 (검색일자 2017/05/27)
- 일본 무역 진흥기구 아시아 경제 연구소. 2016. 『아시아 동향 연보 2016년판』. https://ir.ide.go.jp/index.ph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snippet&index_id=4116&pn=1&count=20&order=17&lang=japanese&page_id=26&block_id=95 (검색일자 2017/05/27)
- 일본 무역 진흥기구 아시아 경제 연구소. 『2015. 아시아 동향 연보 2015년판』. https://ir.ide.go.jp/index.ph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snippet&index_id=4117&pn=1&count=20&order=17&lang=japanese&page_id=26&block_id=95 (검색일자 2017/05/27)
- Attayuth Bootsriboom. 2018. “Stage Being Set for ‘Neutral’ Prayut to Return as the PM.” *The Nation*. <http://www.nationmultimedia.com/detail/politics/30343126> (검색일자 2018/ 4/14)
- Aekarash Sattabruth and Wassana Nanuam. 2018. “Cracks Appear in the Regime.” *Bangkokpost*. <https://www.bangkokpost.com/news/politics/1403578/cracks-appear-in-the-regime> (검색일자 2018/1/29)
- Bangkokpost and Reuters. 2017. “Thailand, China to Move forward on Train, EEC Projects.” <https://www.bangkokpost.com/news/general/1293110/thailand-china-to-moveforward-on-train-eeec-projects> (검색일자 2017/07/24)
- Bangkokpost. 2016. “S44 ‘Does More Harm’, Experts Say.” <https://www.bangkokpost.com/news/politics/1089213/s44-does-more-harm-experts-say> (검색일자 2016/9/19).
- Bangkokpost. 2018. “PM to Review S44 Orders, Search for ‘Thai

- Democracy’.” <https://www.bangkokpost.com/news/politics/1396966/pm-to-review-s44-orders-search-for-thai-democracy> (검색일자 2018/01/17)
- BBC NEWS. 2006. “Coup No Surprise to Thai Media.”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5363618.stm> (검색일자 2006/09/20)
- Connors, Michael K. and Kevin Hewison. 2008. “Introduction: Thailand and the ‘good coup’.”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1) : 1-10.
- Singh, Daljit and Malcolm Cook. 2017. *Southeast Asian Affairs 2017* _____ . 2016. *Southeast Asian Affairs 2016* _____ . 2015. *Southeast Asian Affairs 2015* _____ .
- Farrelly, Nicholas. 2016. “Being Thai: A Narrow Identity in a Wide World.” *Southeast Asian Affairs 2016* : 331-343
- Hewison, Kevin, 1992. “Political Space in Southeast Asia: ‘Asian-Style’ and other democracies.” *Democratization*. 6(1) : 224-245.
- iLaw. 2015. “Report on the Exercise of Power under Section 44 of the Interim Constitution of Thailand.” <https://ilaw.or.th/node/3938> (검색일자 2015/11/18)
- Metta Wongwat. 2017. “A Decade of Article 112 Cases.” *Prachatai*. <https://www.prachatai.com/english/node/7466> (검색일자 2017/11/15)
- OECD. 2018.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preliminary version).
- Patpon Sabpaitoon and Arkarach Satttaruth. 2018. “Seksan Blasts Divisive Politics: Academic Takes Aim at Autocratic

- ‘Thainess’.” *Bangkokpost*. <https://www.bangkokpost.com/news/politics/1425439/seksan-blasts-divisive-politics> (검색일자 2018/03/10).
- Pattana Kitiarsa. 2006. “In Defense of the Thai-Style Democracy.” unpublished paper.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October 12.
- Pesek, William. 2017. “Why Thailand Risks a Lost Economic Decade.” *Nikkei Asian Review*. <https://asia.nikkei.com/Economy/Why-Thailand-risks-a-lost-economic-decade2> (검색일자 2017/1/ 26)
- Pravit Rojanaphruk. 2014. “What Makes ‘Thai-style Democracy’ Globally Palatable?.” *The Nation*. <http://www.nationmultimedia.com/politics/What-makes-Thai-style-democracy-globally-palatable-30240809.html> (검색일자 2014/8/13)
- Pravit Rojanaphruk. 2017. “Article 44 as Strong Medicine and Its Side Effects.” *Khaosod English*. <http://www.khaosodenglish.com/opinion/2017/03/04/article-44-strong-medicine-side-effects/> (검색일자 2017/3/4)
- Reuters. 2018. “Thai Court Jails Blind Woman for 1-1/2 Years over Royal Insult.” <https://www.reuters.com/article/us-thailand-king-insults/thai-court-jails-blind-woman-for-1-1-2-years-over-royal-insult-idUSKBN1ET0UA> (검색일자 2018/01/04)
- Taam Yingchareon. 2018. “Abhisit Pledges Return to ‘Core Values’.” *Bangkokpost*. <https://www.bangkokpost.com/news/politics/1442154/abhisit-pledges-return-to-core-values> (검색일자 2018/04/07)
- The Straitstimes. “Thailand's New Constitution: What You Need to

- Know.” 2017.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thailands-new-constitution-what-you-need-to-know> (검색일자 2017/4/6)
- Thailawforum. 2017. “Thailand Ready to Invoke Article 44 for High Speed Railway.” <http://www.thailawforum.com/thailand-ready-to-invoke-article-44-for-high-speed-railway/> (검색일자 2017/06/19)
- Thitinan Pongsudhirak. 2018. “Elections, Corruption and Thai Democracy.” *Bangkokpost*. <https://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1412830/elections-corruption-and-thai-democracy> (검색일자 2018/2/16)
- Tongchai Winichakul. 2006. “Bad Excuse for the Coup.” <http://www.newmandala.org/wp-content/uploads/2006/09/thongchai-%20bad%20excuse%20for%20the%20coup.pdf> (검색일자 2018/05/27)
- Villadiego, Laura. 2017. “Thailand Chases Chinese Money, but at What Cost?.”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www.scmp.com/week-asia/society/article/2102934/thailand-chases-chinese-money-what-cost> (검색일자 2017/07/23)
- Wasamon Adujarint. 2017a. “Continued Article 44 Use Degrades Thai Democracy, academics fear.” *The Nation*. <http://www.nationmultimedia.com/news/national/30316131> (검색일자 2017/5/24).
- Wasamon Adujarint. 2017b. “PM to Use Article 44 to Break Impasse over Political Parties.” *The Nation*. <http://www.nationmultimedia.com/detail/politics/30334335> (검색일자 2017/12/20)

- Wasamon Audjarint. 2018. “Some Article 44 Orders to Become Permanent Laws.” *The Nation*.
<http://www.nationmultimedia.com/detail/politics/30335954>
(검색일자 2018/01/11)
- Wa Sasana Nauam. 2018. “80,000 Online Petitioners Demand Prawit's Removal.” *Bangkokpost*. <https://www.bangkokpost.com/news/politics/1413223/80-000-online-petitioners-demand-prawits-removal> (검색일자 2018/2/16)
- Wichit Chaitrong. 2017. “Centre Sees Slight Growth in Thai Economy 2018.” *The Nation*.
<http://www.nationmultimedia.com/detail/Economy/30334327>
(검색일자 2017/12/20).
- Zakaria, Fareed. 1997.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76(6).

(2018.04.23. 투고, 2018.04.24. 심사, 2018.05.14. 게재확정)

<Abstract>

Thailand in 2017: The Resurgence of “Sarit Model” and Thai-Style Democracy

PARK Eun-Hong
(Sungkonghoe University)

Thailand in 2017 the public sentiment has turned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The four pledges the military declared immediately after the 2014 coup, restoration of democracy, addressing of divisive politics, eradication of corruption, and stimulation of the economy have all failed. In the same year, however, Thai military junta began to recover it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including US and EU owing to promulgation of the new constitution endorsed by King Maha Vajiralongkorn and the lavish funeral of late King Bhumibol Adulyadej which was attended by huge number of condolence delegation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Since the 2014 coup, US has sanctioned the country under military junta led by General Prayuth Chan-o-cha for urging them back to the barracks. EU also joined this sanction measures. US signaled change in its policy when General Prayuth got the chance to visit US and meet President Donald Trump in 2017. General Prayuth Chan-o-cha's military junta could start to restore its reputation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he used absolute

powers based on section 44 of the interim constitution, also guaranteed in the new constitution. Oversea and national human rights groups have criticized that the interim constitution for permitting the NCPO, Thai military junta's official name, to carry out policies and actions without any effective oversight or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n 1 December 2017, Thailand marked the one-year anniversary of King Maha Vajiralongkorn's accession to the throne as the country's new monarch, Rama X. In the first year of King Rama X's reign, arrests, prosecutions, and imprisonment under Article 112 of Thailand's Criminal Code (lese-majeste) have continued unabated in Thailand. NCPO has continued to abuse Article 112 to detain alleged violators and curb any form of discussion regarding the monarchy, particularly on social media. In this worsening human rights environment General Prayuth Chan-o-cha enforced continuously campaign like Thai-style democracy- an effort to promote largely autocratic 'Thainess' in such a way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threatened. It is a resurgence of 'Sarit Model'. In the beginning of 2017 Thai military government raised the slogan of 'opportunity Thailand' in the context of 'Thailand 4.0' project which attempts to transform Thai economy based on industry-driven to innovation-driven for recovering robust growth. To consider freedom and liberty as a source of innovation, 'Thailand 4.0' led by 'Sarit Model' without democracy would be skeptical.

Key Words: Prayuth Chan-o-cha, NCPO, Section 44 of Interim Constitution, Lese Majeste Law, Sarit Model, Thai-Style Democracy

